다산포럼

문재인 정부 18개월의 한국경제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국민 다수의 압도적 지지를 업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남북 관계의 급속한 개선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는 극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한 절대적 지지가 크게 약화함과 동시에 제반 경제 정책에 대한 실망과 탄식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서민들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그 열렬했던 지지도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 통일로의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하다.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를 위해 과감하게 북미 간 중재역을 자임하고 나섰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정이 없어 보인다. 통일·외교·안보 담당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긴장과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음이 눈에 선하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조마조마할 따름이다.

2019~2020년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개선되리라 예측하는 기관은 거의 없는 듯하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고조, 미국 연준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 등으로 2019년 세계경제가 2018년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온통 어둡고 우울한 전망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내 경제의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2017년 3%를 넘었던 실질 경제성장률이 2018년에는 2.7%대로 하락하고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건설 투자와 제조업 설비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 2015~2017년까지 비교적 설비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고정자산 및 생산 능력의 심각한 공급 과잉이 초래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른 투자 재조정 과정에서 제조업의 설비 가동률이 크게 하락했다. 2010년까지 80% 전후를 유지했으나 최근 70%까지 내려간 것이다. 특히 전자부품, 통신, 가전 등 전자 관련 산업에서 2018년 2·3분기 연속으로 설비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변했다. 해외 여건 악화로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기 시작할 경우, 설비 투자 감소 및 설비 가동률 저하가 국내 경기에 미칠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여기에 2018년 중·하반기 부동산 규제 강화로 건설 관련 투자도 당분간 더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부채가 1500조 원을 넘은 데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분위기로 내년에는 가계 부채 증가 압력이 더 커질 것이다. 가뜩이나 소비 심리가 세대를 막론하고 얼어붙어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채 상환 부담의 가중이 가계 전반의 소비 증대에 커다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상의 국내외 경제 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문재인 정부에 커다란 도전과 시련이 닥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도전과 시련을 이겨 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론적 토대가 부실하고 한 번도 현실 속에서 검증해 보지 않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서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는커녕 부정적인 효과만을 창출하고 있다면 대폭 손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촛불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려면 1년 반 동안 지지부진했던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박차를 가해 하루빨리 공정 경제의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혁신 성장을 위한 혁신 능력을 강화하려면 생산 현장에서 협력에 기반한 혁신 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

지난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는 적재적소에 책임 있고 리더십이 있는 전문가를 발탁·기용하는 데 실패했다. 주요 핵심 부처 장관들이 전문성 결여 및 현실감이 떨어지는 함량 미달의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여건에서 정부의 개혁 주도 세력이 관료들을 장악해 소기의 개혁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설상가상으로 검증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청와대 비선 세력들이 막후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내각 무용론마저 비등해지고 있다.

주요 부처 장관 전문성 결여

내년에도 조야하거나 엉성한 정책들로 인해 서민들의 민생이 내팽개쳐지거나 등한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민심 이반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공을 들이고 있는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이 전 국민의 열렬한 호응 속에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까? 정교한 민생 경제 활성화 대책과 지속적인 경제 민주화 정책으로 국내 경제에 온기가 돌 때야 비로소 남북 경제 협력의 토대도 굳건해질 것이다.

NGO칼럼

영산강은 우리 모두의 자산, 상생해야

김광훈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상임대표

영산강 죽산보가 지난 1일부터 수위를 1.35m 낮추기 위해 완전 개방됐다. 이에 대해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에서는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승촌보의 경우 지난 15일부터 수막 재배 농민들의 지하수 부족의 이유를 들어 당초 2.5m의 수위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6m까지 다시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수질 회복과 수생태 복원의 과제는 15일 전의 조사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농민들은 상시적으로 3.5m 수위를 주장하고 있어 물 관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상생의 관계에서 정리되고 합의돼야 할 문제이다.

죽산보 어민들은 수량 부족으로 고기를 아예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몽탄대교까지 어업 구역을 늘려 주는 방법에 대해 행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만큼 긍정적 합의를 기대한다.

다만 어민들도 어획량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할 것이다. 어획량이 줄어든다고 불법 어망을 설치해 치어까지 조업하는 행위와 어망 처리에 비용이 든다고 어망을 강에 버리는 행위는 생상의 강을 만드는 데 저해 요인이 된다.

황포돛배는 다야들에서 석관정 코스로 관광 시간이 절반 정도 줄어들어 이용객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나주시가 함평군과 합의해 함평군 용호마을 장탄섬까지 코스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행정 기관에서는 향후 수질, 수생태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추가하고 지점 확대, 측정 주기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수질의 경우 일반 수질, 조류, 수심별 수질 등에 대하여 기존 주 1회에서 주 1~2회로 측정을 강화하고 수생태는 어류 저서동물 등을 포함한 수생태계 변화에 대해 보가 개방되는 동안 연 5회 이상 모니터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상 생태는 보 주변 육상 동물 및 서식 환경 변화에 대해 연 4회 조사를 실시하고 수위 저하 개시부터 완료 이후 약 1주일 동안 어도, 저수로 수변부의 어패류의 구제 활동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수는 지하수 관측정(승촌보·죽산보 각 16개소)에서 수위 변동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하고 취·양수장의 용수 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 현황에 대해서도 관찰한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경관, 퇴적물, 수문, 하천 시설, 구조물, 보 활용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강은 우리가 상생하는 길이고 사람들의 주변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 길이다. 수질 및 수생태 회복과 맞물려 물의 이용도 중요한 만큼 영산강을 살리고 아끼는 공통 분모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농민도 어민도 시민사회단체도 행정도 '영산강을 살리자'는 의견에는 모두 찬성한 만큼 상생 방안에 대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산강의 물(수량)이 생존권과 맞물려 있다는 점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 다만 생존권에 대한 부문은 수질과 수생태계에서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수량과 수질, 수생태계가 건강한 강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다.

올해 말까지 모니터링 결과와 합의를 바탕으로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가 이뤄진다. 내년 6월에는 국가 국가 물관리 위원회와 유역별 물관리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용역에 들어간 물관리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여기에 민간의 참여가 대폭 확대돼야 할 것이다. 과거 수계관리 위원회처럼 주민 참여와 시민사회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물관리 위원회는 또 다른 한계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보를 비롯한 강 하천의 수질, 수생태의 자연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기 고

공공교통 혁신으로 활력이 넘치는 광주

김준영
광주시 교통건설국장

지난 9월, 3박 5일 일정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독일 뮌헨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선진 교통 체계를 체험하고 배우기 위해서다. 이번에 방문한 도시는 모두 지하철, 트램,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 특히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건국 1000년을 기념해 지금으로부터 122년 전인 1896년 개통된 지하철 M1노선이 아직까지 운행되고, 이외에도 2014년 개통한 M4노선은 최신 디자인과 아름다운 역사를 갖추고 많은 이용객을 수송하고 있다. 광주시보다 면적과 인구가 적은 독일 뮌헨은 8개 지하철을 중심축으로 버스, 트램을 보조 수단으로 완벽한 연계 환승 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이 무려 80% 이상인 것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듣던 대로 대중교통 선진 도시다웠다.

유럽 도시는 우리의 대중교통 체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런 의문 속에서 출장이 끝날 무렵 스스로 느낀 점은 이곳 유럽은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교통 분야 만큼은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선진국에서 중요하게 강조한다는 '공공성'의 관점으로 우리 광주의 대중교통 체계를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다.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교통 정책 도입이야말로 우리 광주 대중교통이 나아갈 방향이자, 지향점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한 것이다.

2018년은 광주시 대중교통 체계에도 많은 변화의 한해가 될 것이다. 먼저, 지난 10월 '행복 1번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된 대중교통 관련 시민 불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대중교통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혁신안은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 제고와 이용 편의성 획기적 개선, 도시철도와의 환승 편의성 극대화, 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 재정 절감을 통한 준공영제 효율화라는 4대 혁신목표 아래 5대 전략 20개 실행 과제가 선정됐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우선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BIT) 설치율을 50%까지 확대하고 무장애 정류장도 105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버스 전용 차로 3개 구간을 추가 지정해 총 11개 노선에서 운영된다. 출·퇴근시간에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하는 '탄력 배차제'를 강화하고, 예비 차량 투입과 증차 등을 통해 배차 시간을 급행 버스는 5분, 각 생활권역을 연결하는 간선 버스는 12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특히 효천·진월지구 등 신도심 교통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급행 2개 노선 신설 등 급행 버스 운영 체계도 완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기 시내버스와 저상버스도 전체 시내버스의 40%까지 교체하고, 지하철역과 시내버스 정류장간의 이격 거리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 수익 노선 입찰제와 소형 버스 도입 등 재정 절감 정책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광주다움이 묻어나는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대중교통 수단 분담율 제고 및 이용 편의 증대,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라는 4대 목표 10개의 추진 전략으로 구성된 '제3차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기본계획'도 수립됐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도시철도와 시내·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편의성을 대폭 높이고 대중교통 수단간 연계성을 높이며, 승용차 통행을 규제하는 교통 수요 관리 방안이 다수 포함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16년간 지역 사회 논란의 중심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를 새로운 광주형 협치 모델인 시민 참여형 공론조사를 통해 해결했다는 점이다. 무려 78.6%라는 다수 시민의 의견에 따라 2호선 건설이 결정됨에 따라 시민 교통 편의와 복지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광주시는 지하철을 주요 간선 축으로 버스를 보조 간선 축으로 대중교통 수단간 기능을 재정립하고 권역별 주요 환승 거점을 구축하는 등 지하철과 버스, 자전거의 연계 환승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여 시민 50%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진정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열어갈 것이다.

이처럼 광주는 지금 공공교통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그러나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광주시는 새로 발표된 대중교통 혁신 방안과 대중교통 기본계획, 2호선 건설 계획에 대한 섬세한 후속 조치로 시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시민 교통 복지 증진과 함께 대중교통 종사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社 說

'청년 첫 국민연금 대납' 포퓰리즘 아닌가

전남도가 내년부터 주민 중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달 치 보험료를 대신 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른바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제도라는 것인데, 내년 만 18세 인구 2만1000여 명 중 20%가량에 해당하는 4500여 명에게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월 9만 원을 1회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주면 이들은 통상 27~28세 나이에 가입하는 일반 직장인들보다 가입 기간이 10년가량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령액이 많아진다. 국민연금은 18세 때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내면 이후 10년간 보험료를 미납해도 나중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미납 기간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주기 때문이다.

불법은 아니라지만 시도지사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이처럼 대규모로 '국민연금'을 빼먹게 되면 앞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는 눈덩이처럼 가속화될 것이다. 28세쯤 첫 보험료를 내고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게 되는 대부분의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이다. 게다가 18세에 첫 보험료를 낸 청년 중에서도 나중에 수천만 원의 추가 납부를 할 수 있는 부유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도 생긴다. 국민연금의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의 재임 기간 동안 이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은 시범 운영 기간이며, 앞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한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도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실직자 등을 위한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편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만을 위한 혜택이 지자체 예산 대신 모든 국민의 노후 자금 창고인 국민연금에서 지출된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생긴다. 따라서 전남도는 이러한 생색 내기 복지 포퓰리즘을 당장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빨리 법을 고쳐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전남 지역 소득 '역외 유출' 줄일 방안 없나

전남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이 연간 10조 원 이상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에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지역 소득 규모가 갈수록 커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소득 역외 유출의 결정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남에서는 11조 5236억 원의 '요소 소득'이 역외로 빠져나갔다. 요소 소득이란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근로 소득과 지역에 있는 기업 소득을 합친 것이다. 모두 9개 시도에서 소득이 유출됐는데 시도별로 보면 충남이 24조 971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16조 1003억 원), 울산(13조 6305억 원), 경남(12조 205억 원), 전남 등의 순이었다.

서울 등 나머지 7개 지역은 소득이 유입됐다. 유입액은 서울(40조 3807억 원)이 월등히 많았고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가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로 62조여 원이 유입돼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였다. 전남 지역의 소득 유출은 서울·경기·광주 등에 본사를 둔 기업이나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돈은 전남에서 벌고 소비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의 역외 유출은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전남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선 생산·유통·소비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도록 전남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도 지역 간 소득 분배 격차가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청산도·대모도

지난주 금요일 밤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한 드라마에 빠졌다. 드라마의 배경이 된 수려한 경치가 눈에 들어와서였다. tvN에서 방영하는 '톱스타 유백이'. 대형 사고를 쳐 외딴섬으로 유배된 톱스타 유백이 슬로 라이프의 섬 여즉도에서 깡순이라는 처녀를 만나 벌어지는 문명 충돌 로맨스물이라고 한다.

이 드라마 속 섬의 주 촬영지는 완도군 청산면에 있는 대모도였다. 대모도의 본섬인 청산도의 아름다운 풍경도 종종 등장한다. 지난주 방송된 2회편에서는 청산도의 코스모스 밭과 대모도의 에메랄드 빛 바다가 눈길을 끌었다. 영화 서편제의 촬영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청산도는 지난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되면서 더 유명해졌다. 청산도(靑山島)는 사시사철 푸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모도·소모도·여서도·장도 등 4개의 유인도와 여러 개의 무인도로 이뤄져 있다.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5배 정도인데 2000여 명이 살고 있다.

7~8년 전쯤 1박2일 일정으로 청산도를 다녀온 적이 있다. 청산도항에서 점심 식사로 삼치 회를 먹은 후 도락리와 당리를 거쳐 해안 절경을 감상하는 명품 길을 해질 녘까지 트래킹하며 청산도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청산도는 자연환경도 아름답지만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시골과 고향의 아늑함을 선사한다. 섬 곳곳에 초가집·흙돌 집·돌담 길·구들장 논 등과 같은 옛 풍물들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시간이 머물러 있는 곳이란 느낌이 들어 마음이 차분해진다.

청산도에 딸린 섬 대모도(大茅島)는 모초(茅草) 즉 띠가 많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행정 구역상으로는완도군 청산면 모도리다. 앞바다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며 낚시터로도 유명하다. 인구가 200명도 안 되는 이 섬은 '톱스타 유백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사는 곳으로 묘사돼 시청자들에게 수려한 청정 경관을 선사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탄 곳은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대부분 수려한 풍경과 고요 또는 느림의 미학으로 문명에 찌든 때를 씻어 준다. 다만 유명세 때문에 청정 환경이 도시의 때로 물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취재본부=박지경 부장jk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